

##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한목소리'

### 전국혁신도시협,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현실적 대안 될 것"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뭉쳤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4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지금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겨우 13%대 채용률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률은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을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인데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법제화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으고 지난 8일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인재 채용의무법)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당 당론으로 채택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4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신창호 부산 영도구 부구청장, 백중수 원주부시장, 전원권 진천부군수, 서정욱 울산 중구 부구청장, 최인식 음성군 경제개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안인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초에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여·야 3당 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역인재 의무채

용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김승수 시장은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모든 혁신도시들이 끝까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오늘 반가운 단비  
도내 강수량 20~60mm

15일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중부 지방, 강원도영서, 충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기상청은 14일 "15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15일 낮부터 16일 낮 사이에 전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강원도영동, 제주도 제외) 20~60mm이다. 특히 서울·경기도·강원도영서·충청남도는 80mm이상, 강원도영동·제주도는 10~40mm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이남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이남보다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세종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0도, 제주 21도 등으로 예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세종 27도, 전주 26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제주 26도 등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중부 앞바다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1.0~3.0m로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박용주 기자

## 서남대 "감사원, 교육부 감사하라"

### "구재단과 유착설 나돌아 사실 규명 위해 청구할 것" 내일 남원서 토론회 열기로

서남대가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예고된다.

14일 서남대에 따르면 서남대 본부와 교수협의회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접수해 정상화 방안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배경에 교육부와 서남대 구재단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서남대 구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남대 구재단은 이홍하 설립자가 한려대를 폐교하고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330억 원을 서남대 정상화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서남대의 과대학 폐지다.

서남대 구재단은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쇄해 복심자병원 등 유류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400억원으로 서남대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남대 의과대학 운영을 목표로 재정기여 의사를 밝혔던 명지 의료병원과 예수병원의 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남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폐쇄하면 기존에 의과대학 운영을 목표로 재정기여의사를 밝힌 명지 의료병원이나 예수병원 등이 손을 댈 수도 있다"면서 "교육부 행태는 결국 거액의 교비횡령으로 구속돼 있는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서남대를 되돌려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두명칭 못한 상황 때문에 서남대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와 서남대 구재단의 유착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 등은 세종시 정부세종청

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을 면담하는 등 반발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서남대 측은 교육부와 서남대 구재단의 유착설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이영 차관은 "컨설팅 방안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기각할 수는 없고, 서남대 측의 안을 마련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국민의당)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서남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용도 충실하지 않은 구재단의 일방적인 계획을 마치 대학 정상화 방안인 것처럼 둔갑시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은 구재단 측과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갖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면서 "오는 16일 남원시청에서 국회의원과 대학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과 함께 서남대의 과대학 존치 등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정부 조사활동 강제종료 공문 '일권행위'"

세월호 특조위 "법령적 근거 없어... 예비비 편성해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를 향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일권행위를 중지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14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지난 9일 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안 제출 협조'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조위가 공개한 공문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안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종합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조위는 해당 공문에 대해 "인양추진단의 업무(기능) 범위를 이탈하고 법령을 무시하는 일권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13일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에서 언급한 '관계부처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조위와 국민에게 적시해줄 것과 특조위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다.

특조위는 "규정 제3조(기능)에 의하면 추진단 업무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돼있다"며 "인양추진단이 특조위의 조사활동과 종합보고서에 대해 논할 법령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각 부처는 최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위한 행정조치를 일사분란하게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행자부, 이달 7일은 기재부가 각각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 관련 '조치 및 정원안'과 '예산안' 제출을 요청했다"며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은 2017년 2월3일이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관련 활동기간은 2017년 2월4일부터 5월3일까지임을 행자부와 기재부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조위 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2016년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주는 것"이라며 "인양추진단이 해야 할 일은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양작업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 매일 INDEX

2면	군산항 저지터 환적화물 취급 제동	3면	국민의당 당당 '더민주 협치 중중해야'
4면	부서진 어근교 난간 석달째 방치	16면	미리보는 '고창 북문자와 수박축제'

**제15회 교육감배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2016년 6월 18일(토) 오후 2시  
전주바울센터 2층 (전주시 완산구 안영로 130)

-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 후 원 :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매일신문사
- 참가자격 및 부문 : 전라북도 내 청소년 동아리/댄스
- 문의 : 063-288-9700